민주, '이재명 1심 선고'에 "더 강한 민주 되겠다"

이 대표 "국민들, 법 질서 회복 원해"
박찬대 "명백한 사법살인…최악 판결"
국힘, '李 사법리스크'에 화력 집중
한동훈 "25일 재판이 끝 아냐" 공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으며 모니터를 보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더 강하고 하나된 민주당이 되겠다"며 당 단합을 강조했다. 이번 선고를 두고 "이재명은 무죄",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가 맞나"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들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공화국의 주인은바로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하는 주권자인 국민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1심 선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 질서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말하며 재판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판결은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정권교체는 대세이고 이 대표는 그 중심"이라며 "주술을 2000번 해도 아무리 잘못되게 판결해도 안 바뀌는 부동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자력으로 정권 창출이 불가한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정권'이 최대 걸림돌인 이재명 죽이기에 이어 대한민국 사법정의까지 말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더 강한 민주당, 더 하나 된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법리적으로 잘못된 만큼 이 대표는 무죄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재판부를 비판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죽하면 (재판부 부장판사가)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이라며 "미국이든 한국이든 최종심은 국민의 투표임이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사실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 행위 중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 개발 관련한 비리"라며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가장 크고 사실상의 유일한 방어선은 이 대표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일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에서 그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와 결론이 있었다"며 "사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5일 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당 내에서 재판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위증교사라는 것은 대표적인 사법 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TF를 당 법률위원회에서 꾸리고, 재판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주 이재명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모두 유죄로 나오자 그동안 검찰에 쏟아붓던 민주당 정치 공세의 화살촉이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미친 판결', '사법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1심 재판부를 비난하고 법원을 공격하는 정치 선동 수위 높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23·30일 장외집회… 이재명은 '민생 행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에도 장외집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 대표는 민생 행보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는 23일 장외집회는 수도권 집중 예정이고 시민사회와 함께 하려고 현재 협의 중"이라며 "오는 30일에는 전국적인 집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장외 집회를 시작으로 지난 16일까지 총 3차례의 정권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원내는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황 대변인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비상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20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같은 날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도 접견한다. 다음날인 21일에는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하며 경기 수원 영동시장을 방문한다. 오는 27일에도 고교 무상교육 방침을 알리기 위한 학교 방문 일정을 계획 중이다.

황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와 관련해 사법부를 연일 공격하고 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당 입장에서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고, 1심 판결일 뿐이고 2심과 3심이 남아있으니까 충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서울=김선욱 기자

여야, 22일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연금특위 구성도 논의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인 내달 2일과 10일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22일까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까지 임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직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양당 간 어떤 숫자로 추천할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더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달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1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본회의를 잡는 건 양당 수석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윤리·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정기국회 내에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가능한 합의해서 출범시키자는데 큰 틀에서 공감했다"면서도 "특위 출범 여부와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양당 수석 간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밀도 있게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3번의 특검 요구가 대통령 거부권으로 부결됐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민의를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특검 거부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장께서 양당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여야 간 입장 차를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이 맞물려 있는데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별감찰관과 특검은 각각 독립해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했고 야당에도 그런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국, 민주에 "검찰개혁 4법 통과 협조" 촉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 4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대선 패배 정치인에 대해서는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해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다"며 "야당, 특히 민주당에 묻는다. 이런 검찰을 그냥 두면 되겠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을 감수하면서 본회의에 올리면서, 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은 안 올리느냐"며 "수사·기소 분리는 민주진보진영의 일관되고 주된 공약이고 이재명 대선 후보도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을 천명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모든 야당에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통과시키자"로 요구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은 모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시행령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했다"며 "민주당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외면한 결과 당 대표가 검찰권 남용의 제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지난 8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도 검찰개혁 3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처법·검찰청폐지법)을 추진 중이나 당론 발의 여부와 시점은 결정하지 못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힘 전남도당 "목포대·순천대 통합 환영"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합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남도당은 18일 도당 사무실을 찾은 전남도 강영구 인재육성교육국장으로부터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강 국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5일 목포대와 순천대가 합의한 대학 통합과 통합의대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김화진 도당 위원장에게 협의된 내용이 정부와 중앙당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합의한 2025년 4월까지 두 대학 통합, 그 이후 하나의 국립 의대와 두 개의 부설병원(동부권, 서부권 각 한 개씩) 유치 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위해 전남도가 추진 중인 의대 신설 공모절차를 보류했고, 오는 29일까지 통합의대 명의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남도의 노력으로 목포대와 순천대가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하며 합의에 따른 전남도의 요청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통합과 통합의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대학간 내부 합의, 통합 소요기간, 통합 행정절차가 선행돼 지역갈등이 우선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차 전남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원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어느 대학에 (의대를) 둘 것인지 전남도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하면서 본격화됐다. 오지현 기자